

#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

## I.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1. 03. 24 (木) 14:00~16: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헤럴드경제 정책세미나 - 2011년 3월 진행(案)

1. 시 기 : 3월 24일(목) 오후 2:00 ~ 4:00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 A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3. 大주제: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  
 小주제: ①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例示)	발표자
주제 1	10분	- <b>한국경제의 位相과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b> . 한국경제의 位相(거시, 通商): 과거와 현재 비교 . 선진 통상국가의 의미와 내용, 가능성 .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	현정택 위원장 (무역위원회)
주제 2	10분	- <b>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과 과제</b> .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에 성공한 사례와 교훈 .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 한미FTA 비준의 의미와 효과, 비준을 위한 과제 등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	정인교 교수 (인하대학교)
주제 3	10분	- <b>선진 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시장개척 전략</b> . 선진 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차별화된 시장개척 전략 필요 . 시장별 차별화, 상품별 차별화, 정책수단 차별화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	이경태 원장 (국제무역연구원)
종합토론			사회: 김주현(HRI 원장)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 1. 한국경제의 위상과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

현 정 태 (무역위원회 위원장)

### ◆ 한국 경제의 위상과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

#### ① 한국 경제의 위상(거시, 통상) : 과거와 현재 비교

-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를 어느 시점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봐야겠지만, 한국 전쟁 직후의 최빈국의 시기와 비교하든, 작년과 비교하든, 어느 시점에서든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함
  - 1960년대와 비교해보면, 당시 1인당 국민소득 80불의 최빈국 이자 원조가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 이제는 **GDP 규모**(약8천억 달러, World Bank(2009)) **세계 15위**, **교역규모**(약 8천억 달러, WTO(2009)) **세계 10위**, **외환보유액**(2,959억 6천만 달러, 한은 '11년 2월말 기준) **세계 5위** 등 **세계 10위권대의 중견국가**로 성장했고, '10.1월부터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여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음
  - 또한 최근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단시일내에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작년에 6%대의 성장을 이루는 등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고,
    - 작년에 수출이 전년 대비 28.6% 증가한 4,674억불, 무역수지 흑자 417억불 등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

- 세계 7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고, 금년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불을 달성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

\* 무역 1조불 달성: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영국, 네덜란드

- 이러한 경제성장을 밑거름으로 하여 작년에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쉽을 발휘하는 한편,

- 한-미 FTA, 한-EU FTA 체결 등 경제대국과의 FTA 체결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해나가고 있음

- OECD 중장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0-2015년까지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3% 증가하여 32개 회원국 중 칠레와 함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대외 개방에 입각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에 있다고 생각

- 국제무역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기업과 경쟁하여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기업을 이끌어 결국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하도록 함

- 특히 최근에는 신흥국 중심의 수출전략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선진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도 빠르게 극복하는 배경

## ② 선진 통상국가의 의미와 내용, 가능성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을 통해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해야 할 것임
  - 최근 OECD에서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구현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1.8%로 떨어지면서 OECD 평균인 2.1%에도 못미치는 저성장 국가로 반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인데, 2016-2025년 우리나라의 고용 증가율은 2010-2015년 0.4%에서 -0.7%로, 생산가능 인구도 2016년을 정점으로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구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2016년 이후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임
    -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적극적인 통상을 통해 해외 시장을 선점해나가는 것이며,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신흥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현재 한-칠레, 한-ASEAN, 한-EFTA FTA 등 17개국에 대한 5개의 FTA협정이 발효 중이며,

- 미국, EU, 페루 등 3개 FTA 협정이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고,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 등 7개의 FTA 협상이 진행 중임
-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9개의 FTA 협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개방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 성장을 극대화하면서 FTA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관세철폐를 통한 급속한 개방만이 능사는 아닐 것인바, 국가별 시장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수출과 투자, 고용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인 FTA 추진이 필요
-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소고기, 자동차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처럼,
  - FTA로 인한 국내 시장 개방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소기업 등 국내 산업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
- 관세가 철폐되고 시장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사후적 무역구제 수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러한 무역구제제도의 전략적 활용도 검토해볼 필요

### ③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 선진 통상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① 먼저 한-중 FTA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음

- OECD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2016년 이후 급속히 성장률이 둔화되어 2016-2025년에는 평균 1.8%의 성장률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내 산업은 핵심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저성장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
- 반면 중국은 그동안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내수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고, 선진국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조짐
  - 대내적으로는 도농간 소득격차, 노사분규 증가 및 임금상승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상해·청도 등 연해도시의 경우 인구가 2~3억명에 이르러 내수 시장 규모가 미국에 맞먹는 수준이고,
  -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 정책에 의해 '07~'09년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18.1%로 동부 지방의 13.9%를 추월하여 급속히 성장하는 등 내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임

- 이러한 중국 시장을 선점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한 큰 모멘텀이 될 것인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FTA를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는 것, 즉 타이밍이 중요함
  -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다른 국가들이 먼저 중국과 FTA를 추진한다면 그만큼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미국·EU와 FTA 체결을 발판으로 해서 빠른 시일안에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또한 한-중-일 FTA도 한-중 FTA와 병행하여 검토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한-중-일 3국간 개방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바, 중국과 FTA를 먼저 추진한 후 일본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② 두 번째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 필요함
  -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국제규범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임
    - FTA를 통해 관세장벽이 낮아지면 관세를 통한 사전적 국내 산업 보호는 효과가 없어지고, 사후적 무역구제수단이 중요함
  - 무역구제제도가 기업이 스스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음
    -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시 대리인 선임비용을 3천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50%까지 지원해왔으나, 실비용의 20% 이하에 불과하여 활용실적이 저조하였는바 금년부터는 지원한도를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음



- 또한 수입급증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동 시스템이 실제 무역구제신청과 연계되지 않았는바, 금년부터는 수입급증 품목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산업피해조사 보고서 형태로 분석하고 실제 신청과도 연계하도록 할 계획임

\*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20%이상이고 '전년도 수입액이 연간 1천만불 이상인 품목'을 관심품목으로 설정하여 수입량을 분석하여 관련 협회에 제공중

- 아울러 FTA 협정문에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및 양자간 무역구제위원회 구성 등 새로운 무역구제절차가 도입되었는바,
  - 미국, EU 등 주요국으로부터 수입급증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세이프가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

### ③ 세 번째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과 적극적 활용이 필요

- 앞으로 한-미, 한-EU FTA가 발효되면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FTA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본 업체를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컨설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음

\* FTA 상대국에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융자, 컨설팅 등 지원

- 컨설팅 자금 : 업체당 24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80% 지원)

- 융자 : 시설(30억원내, 거치포함 8년) · 운전자금(5억원내, 거치포함 담보 5년, 신용 3년), 금리(공자기금-0.7% 변동; '10년 4/4분기 기준 年3.59%)

- 얼마 전 한-ASEAN FTA 발효('07.6) 이후 의류제품의 기본 관세가 13%에서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베트남산 콜프웨어

수입이 급증하여 관련 국내업체가 매출 감소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었음

\* '07년 8%→'08년 5%→'09년 3%→'10년 0%

- 다만,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실효성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
  - 현재 신청기업의 지원요건이 매출 25%이상 감소로 되어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기업이 영업활동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제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원을 받기도 전에 폐업을 한 사례도 있었음
  - FTA로 인한 피해는 산업에 대한 것으로 피해기업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현재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 중소기업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바, 앞으로 산업 전체에 대한 피해를 판정하고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사업전환 등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
  - 지원 내용 중 융자의 경우 농업 분야의 보조금과 확실히 구분되는데,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의 신용, 담보 등을 토대로 시중금리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에서 융자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제도에 비해 신청 실익이 크지 않음
- 지금까지 발효된 FTA는 우리나라 산업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 EU와 FTA가 발효되면 동 국가와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국내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 기업이 빠른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

## 2. 선진통상국가로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정 인 교 (인하대학교 교수)

### 선진 통상국가로의 성공한 사례와 교훈

- ◆ 선진 통상국가의 기본요건
  - 경제통상제도의 선진화 및 합리화
  - 합리적인 통상정책 결정 절차 및 과정
  - 통상협상 외적자원 확보
  
- ◆ 강소선진 통상국가 사례
  - 지도자의 리더십: 싱가포르, 칠레
  - 국민들의 컨센서스: 뉴질랜드
  - 정부와 민간간 합의: 네덜란드, 핀란드
  
- ◆ 교훈
  - 통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 정치적 리더십이 선진 통상국가 구축에 관건
  -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당시 취약산업이었던 농업이 보조금 지급 중단을 주장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개방과 개혁,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기여

##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 ◆ 우리나라 경제통상 제도 상당부분 선진화 진전
  - OECD 가입과 세계화 추진
  - 동아시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과감한 개혁과 개방 추진
  - 적극적인 FTA 추진(한미 FTA)
  
- ◆ 국민들의 통상마인드 부족
  -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
  - 반미주의와 반시장정서 확산
  - 압축성장의 후유증(농업)
  
- ◆ 정치적 리더십
  - 개혁 및 개방적 통상정책 추진에는 정치적 리더십 필수
  - 집권당, 정치권, 언론, NGO의 역할
  - 대의민주주의 원칙
  - 개방적 통상국가 발전전략 수립 및 일관된 추진 의지
  
- ◆ 최근 수쿠크 채권 논란
  - 종교가 경제문제에 관여

## 한-미 FTA, 한-EU FTA 비준 및 이행

- ◆ 현재 이행중인 5개 FTA는 상대국 경제규모, 지리적 요인, 낮은 자유화 수준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활용률이 낮은 상황
  - 현재 이행중인 FTA 대상국: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 ◆ 우리 기업들은 미국, EU와 체결한 FTA 활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경제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분석
- ◆ 한-미 FTA 비준전략
  - 한-EU FTA: 우리 국회 4월경에 비준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한-미 FTA 비준 전망은 한미 양국에서 매우 불투명
  - 우리나라의 경우, 야당의 공세 외에도 여당의 역할이 충분치 않은 상황
  -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 여당의 협조, 언론과 일반국민들의 지지 확보가 필요
  - 한편, 피해업종의 우려와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피해대책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농업개방

- 주요 농업개방 계기
  - UR 타결로 농업개방 시작
  - 시장접근 확대
  - FTA로 지역적·양자적 개방
- UR 이행계획에 따라 농산물 관세수준과 국내보조금을 감축
  - 관세감축(평균 24%), TRQ 제공(67개 품목),
  - AMS한도('95년 2조1,825억원 ⇒ 1조4,900억원)

GATT	UR
1947년 출범,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1986. 9 협상 개시 1993. 12타결
농업은 예외인정(각국보호조치) ⇒ 농산물시장 왜곡 심화	예외없는 관세화(쌀은 관세화 유예)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 감축

- 시장접근 확대
  - 쇠고기 수입쿼터제 철폐(2001)
  - 쌀 재협상 (2005) : 시장접근물량 확대 조건으로 관세화유예

## 농업개방 영향 평가 및 통상국가에 걸맞는 농업정책 수립

- ◆ UR 이행 결과
  - 국제 비교 : 비교적 높은 농업보호수준, 비교적 낮은 농업개방수준
    - PSE : 우리나라(60%), 일본(45), EU(26), 미국(10)
    - 평균 관세율 : 우리나라(65%), 일본(23), EU(15), 미국(5)
- ◆ 농산물 수입증가율 : 감소
  - UR전 10년('85~'94) 연평균 15%, UR이후 10년('95~'04) 연평균 5%
- ◆ 유형별 농산물 생산액
  - **높은** 관세를 확보한 품목의 생산액이 정체 또는 위축 되고, 낮은 관세 품목의 생산 비중 증가 사례

### 고관세 품목과 저관세 품목 생산변동

구분	품목	관세율	생산액(UR 94)전	7 생산액('07)후	대비
고관세	쌀	[미양허]	68,133 (28.3%)	78,575 (22.7%)	생산비중 감소
	마늘	360%	9,724 (4.0%)	3,999 (1.2%)	생산비중 감소
	감귤	144%	5,079 (2.1%)	4,526 (1.3%)	생산비중 감소
	참깨	630%	2,396 (1.0%)	1,891(0.5%)	생산비중 감소
저관세	쇠고기	40%	14,725 (6.1%)	34,478(9.9%)	생산비중 증가
	돼지고기	25%	13,585 (5.6%)	33,197(9.6%)	생산비중 증가
	닭고기	20%	7,509(3.1%)	10,275(3.0%)	생산비중 유지
	백업	36%	182(0.05%)	364(0.1%)	생산비중 증가

www.FTAinfo.net

## 한-칠레 FTA 이행 결과

- ◆ 2003.2.14. 한·칠레 FTA 공식체결
  - 2003.7.16. 한·칠레 FTA 농업지원 대책안 발표
  - 3차례 추가대책 발표
  - 2004.4.1 한·칠레 FTA 발효
- ◆ 협정이행의 농업분야 영향
  - 키위·포도·돼지고기의 수입량 증가
  - 생산액, 재배면적, 사육두수 증가
    - 키위 생산액 : 234억원('04) ⇒ 315('05) ⇒ 320('06) ⇒ 342('07)
    - 시설포도 재배면적 1,781ha('04) ⇒ 1,951('05) ⇒ 1,842('06) ⇒ 1,840('07)
    - 돼지 사육두수 : 8.9천호('04) ⇒ 9.0('05) ⇒ 9.4('06) ⇒ 9.6('07)

칠레로부터의 품목별 수입액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7
키위	2.1	5.9	86	6.9	2.5
신선포도	8.3	11.2	15.2	23.4	29.5
돼지고기	23.3	32.4	32.4	45.1	33.1



## 쌀 관세화 논의

-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쌀 관세화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공론화 한계
  - 정치적 부담으로 논의 부진
  - 쌀 재협상 : '05~'14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
  -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은 '05년 22만 5,575톤에서 매년 2만 347톤씩 증량하여 '14년까지 40만 8,700톤으로 증가
- 조기 관세화 논의
  -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 (MMA 추가증량의무 해소)
  - 신중한 입장 (국제 쌀값, 환율 변동 시 수입가능성)
  -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이 중요 : 농업인 단체 중심의 토론회 등 여론 수렴 과정
- 추진해야 할 사항
  - 쌀 관세화 지연에 따른 정치경제적 부담 검토
  - 쌀 관세화 문제 공론화
  - 쌀 직불제 개선 등 쌀 농업인 소득 대책 마련

##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가능한가?

-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인정 사례
  - 1994년 APEC 보고르선언: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
    - 한국, 당초 선진국그룹으로 분류되었으나 최종 발표단계에서 개도국그룹으로 조정
  - 1992년 기후변화협약(브라질 리우): 개도국 지위 인정. 2005년 1월 16일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2008~2012년 의무대상국에서 제외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개도국지위 인정. 2004년까지 농산물 개방 유예
- 다자무역체제에서의 개도국 우대사항
  - WTO 일반규정
    - 관세삭감 : 6년간 36%(품목별 최소 15%), 국내보조감축 : 6년간 20%
    - 수출보조금액 : 6년간 재정금액 36%, 보조수출물량 21%, 보조금 감축면제 보조수준 : 5%
  - 개도국우대 규정
    - 각종 감축약속 및 이행기간상의 우대(감축률 : 선진국의 2/3, 이행기간 : 10년)
    - 국내보조허용대상 정책범위 확대(일반투자, 영세농 보조, 투입재 보조 등 허용)
    - 수출보조감축대상 유형의 축소: 국내 수송비, 유통비용 지원 허용
      - 보조금 감축면제 보조수준 우대: 10%(최빈개도국: 의무면제)

##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가능한가?

- ◆ 국제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
- ◆ UN 등 국제기구는 일인당 GDP 수준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 ◆ WTO 35개국 선진국 분류
  - 개도국 여부 자기선언원칙이나
  - 그렇다고 순수 자기선언도 아님(Peer Pressure)
- ◆ 경제규모 고려 불가피한 상황
  - 중국, 개도국과 선진국 중간 수준으로 WTO 가입(이행계획(C/S) 일부 개도국 포기)
  - 몰도바, 대만 선진국(de minimis)
- ◆ EU 일부 회원국, 우리나라보다 경제여건 불리 → 한국 개도국 인정 어려울 것
- ◆ 개도국 너무 광범위
  - 아프리카, 중남미(브, 아), 인도, 중국, 한국
- ◆ 1990년대와는 상황이 다름
  -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 ◆ DDA 타결 지연은 우리에게 더 불리
  - 상당한 양보를 통해 개도국지위 유지 가능할 수 있으나, 경제적 실익, 농업구조조정 지연 등에서의 문제 제기
- ◆ 개도국 세분화 논의시 우리나라의 입장은 더 약화될 것
  - DDA 이후에는 선발개도국 지위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

## 동아시아 경제통합 참여하자

- ◆ 동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활동 주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통합) 논의 기여
  - 이후 참여정부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으로 동아시아보다는 동북아 강조
  - 2009년 2월 '신아시아구상'
  - 아세안+3 vs 아세안+6 vs 아세안+8
- ◆ 우리나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밑그림 있는가?
  - 중일에 비해 follower라는 의식
  - 중일간 견제 및 경쟁관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결정적인 역할 수행 가능성
- ◆ 한중일 협력사무소 한국 설치
  - 목적: 한중일간 정상회의 포함 각종 협력사업 조율
  - 동북아, 동아시아 경제통합 비전 마련이 선행되어야.
  - 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한 의제 발굴, 중장기적으로 역내통합 로드맵 개발 논의를 주도해야 협력사무소가 국제기구로 발전가능

## 지킬 수 있는 국제적 약속(commitments)

- ◆ 선진국과 개도국간 ‘Bridge’ 역할 자주 언급
  - 서울 G20 정상회의
  -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합의에 따른 감축행동
  - 관련 감축과 검증 파트너십 참여
  - APEC Bogor Goal
  
- ◆ ‘Bridge’ 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국내 정치경제적 능력 제고 및 환경 개선 필요
  
- ◆ 국제적 commitment 신중 필요
  - 한-칠레 FTA 협정 개선 문제
  - 기후변화관련 BAU 30% 감축 방침 결정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 대비

### 3.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시장개척 전략

#### 이 경 태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 3-1. 선진국 진입과 통상선진화의 관계

한국은 통상의 확대재생산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번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외충격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또한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도 내수진작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투자와 소비를 단기간에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많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안되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어렵다. 의료와 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대외개방과 국내적 규제완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 이미 통상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작년에 수출은 세계7위, 교역은 세계 9위이었고 올해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의 무역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진국 진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적어도 3만 달러는 되어야 한다. 그 바탕위에서 경제제도와 관행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해 져야 한다. 나아가서 경제제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제도로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제도와 관행의 합리화를 통해서 정부와 국민간, 사회구성원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

통상이 국민소득의 증대를 계속해서 주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장과 질적인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과 질은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며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양적인 확대가 있어야 질적인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질적인 구조고도화 없이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진통상국가를 한국에 대입하여 정의하여 본다면 '통상의 양적확대와 질적인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높은 국민소득이 달성되고 제도와 관행의 합리화를 통해서 신뢰의 사회적자본이 확보되는 국가'라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선진통상국가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3-2. FTA를 통한 경제영토의 확장

#### 가. 한·EU FTA 국회비준을 위한 과제

한·EU FTA는 한·미 FTA 못지 않게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정이다. 인구 5억, GDP 16.3조 달러, 수입 4.5조 달러의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선진 시장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 시장에서 지난해 수출 535억 달러, 수입 387억 달러로 14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시장개방 속도가 빠르고, 그 폭이 넓기 때문에 산업계가 한·EU FTA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다. 동시에 이념적으로 치우친 한·미 FTA 반대 논리와 달리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큰 반대가 없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번역의 오류가 지적되었다. 일부는 국제조약의 번역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오해였으나, 일부는 오역으로 인정될 부분도 있었다. 일만 페이지가 넘는 조약문과 수 많은 숫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에서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번역 전문 TF를 구성하겠다고 한만큼, 실수에 의한 번역오류로 FTA 비준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 이러한 번역오류를 빌미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나, 2007년 협상 개시 전부터 한·EU FTA에 대한 많은 연구와 산업계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2010년 10월 공식서명이 끝난 후 국회차원에서 3번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기 비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최근 발효시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FTA의 효과를 앞당겨 실현시키기 위해 양측 정부간에 7월 1일 잠정발효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유럽의회는 지난 2월 동의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더 이상 논쟁의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최대한 조기에 비준과정과 관련 법률개정을 마쳐 우리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 한·미 FTA 발효를 위한 과제

한·미 FTA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통해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데 이어,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 자동차 노조, 자동차 회사들이 찬성으로 돌아섬에 따라 조기 발효가 기대되었다. 미 행정부도 본격적인 의회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해 3월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FTA를 지지하는 입장인 공화당이 우리와의 FTA 외에도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발효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화당은 3개 FTA를 모두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미 FTA, 미·파나마 FTA는 지지하나, 미·콜롬비아 FTA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콜롬비아 내 열악한 노동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한·미 FTA는 다른 두 FTA 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다. 한국은 미국에게 8위의 수출 상대국으로 콜롬비아(22위), 파나마(34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10년 한·미간 교역규모는 877억 달러로 미·콜롬비아 교역 규모의 3배 이상이고, 미·파나마 교역규모의 13배가 넘는다. 미국에게 한국은 동북아 국가와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국가이자, NAFTA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무역협정 상대국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기존의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모두 조기에 발효시켜야 한다.

**<비준대기중인 FTA 상대국과 미국의 2010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수출	38,843(7위)	12,043(20위)	6,068(36위)
수입	48,859(7위)	15,647(25위)	378(93위)
교역	87,702	27,690	6,44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3.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시장개척 전략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한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주미 대사관과 함께 미국 현지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풀뿌리(grass root)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올해도 FTA가 비준될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미국은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에 따라 비준법안이 상정되면 90일 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야당은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도 미국이 비준해야만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된다면 다행이겠으나, 미국과 달리 처리시한이 없는 우리 국회에서의 처리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2012년 말에는 양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므로, 올해 비준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정치 이슈에 묻혀 FTA 비준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양국 모두 조기에 비준해야 할 것이다.

#### <한·EU 및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구분	한·EU FTA	한미 FTA
GDP(%)	▲5.6%	▲5.97%
후생(억달러)	▲320	▲209
무역수지(연평균, 억달러)	▲3.6	▲4.7
수출 증가(연평균, 억달러)	▲25.3	▲13.3
수입 증가(연평균, 억달러)	▲21.7	▲8.6
고용 증가(명)	▲253,000	▲335,700

\* GDP, 후생, 고용증가는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한 자본축적 모형

\*\* 무역은 한·EU FTA의 경우 15년간 연평균, 한·미 FTA의 경우 10년간 연평균 증가액

\*\*\* 자료: 10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10.10)

11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4)

#### 다. 일본 및 중국과의 FTA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10년 기준, 2위 ASEAN, 3위 일본)이자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거대 경제국가이다. 한·중 FTA의 파급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해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중

### 3.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시장개척 전략

국 시장의 본격적 공략을 위해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중국산 저가 상품의 범람으로 국내 제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농산물 문제가 거론되면 FTA 불가론은 더욱 힘을 받는다. 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FTA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한·중 FTA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도 한·중 FTA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우선 한·중 FTA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10년 5월에 '07년부터 실시됐던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9월부터 한·중간 FTA 민감품목 처리방안을 위한 정부간 사전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FTA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의 논의는 한·중 FTA 효과 극대화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진 방향은 기대를 높이고 우려를 줄이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일괄 타결방식이 좋을지 협상 속도와 민감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점진적) 방식이 좋을지 검토해야 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상품무역 이외에도 투자·서비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실익 있는 개방을 얻어내야 하며 동시에 내부적으로 농수산, 섬유, 일반기계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산업에 대한 대책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FTA에는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자 세계 3대 경제대국, 주요 부품 및 소재의 조달처라는 사실과 함께 산유국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한·일 FTA로 인해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역내 경제권 통합과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고려할 때 한·일 FTA도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양국 정부도 '04년 중단되었던 FTA를 재개할지 여부를 두고 '08년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가져왔고 '10년 9월부터는 고위급(국장급)으로 논의 수준을 격상했다.

한일 FTA는 무엇보다도 이익의 균형이 가능한지 즉, 우리가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는지를 두고 그 협상 재개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과거 협상이 중단될 때도 우리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일본

### 3.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시장개척 전략

측이 소극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협상이 중단된 바 있는데, 이러한 쟁점에 대한 공감과 해결책 마련 없이 협상이 재개될 경우 다시 협상이 비슷한 이유로 난항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일본의 낮은 관세율, 높은 산업경쟁력,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고려하여 이익의 균형을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일본측도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해 우리측이 요구한 비관세 장벽 해소, 농수산물 개방 폭 확대,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한·중 FTA, 한·일 FTA 논의와는 별도로 한중일 3국간 FTA 추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10년 5월부터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12년 초까지 공동연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중일 FTA는 한중 FTA와 한일 FTA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05년 KIEP, 우리나라 GDP 효과: 한중일 FTA 3.27% > 2.79% 한중 FTA+한일 FTA(한중 FTA 2.44%+한일 FTA 0.35%)) 그러한 만큼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중일 FTA를 비롯하여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FTA가 발효 중인 FTA 중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는 상대는 ASEAN과 인도 정도로 꼽을 수 있다. ASEAN의 경우 실질적인 양허수준이 80% 수준으로 낮고 개방 스케줄이 장기간에 걸쳐있고(예를 들어 베트남의 민감 품목군은 관세인하가 2021년까지 걸쳐있음) 일부 품목에서는 일본이 ASEAN 국가들과 체결한 FTA 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의 경우 전체적인 개방 수준이 85% 수준으로 낮아 인도가 경쟁국인 일본측에 개방한 90%보다 낮다. 또한 인도와의 FTA는 2006년 관세를 기준으로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그간 인도가 MFN 관세를 낮추어 CEPA 특혜관세가 인도의 현행관세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3.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시장개척 전략

#### <관세 역전 사례(건설중장비)>

(단위: %)

구분 \ 연도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EPA특혜관세	(12.5)	10.9	9.4	7.8	6.2	4.7	3.1	1.6	0.0
현행관세	12.5	7.5	7.5	7.5	7.5	7.5	7.5	7.5	7.5

정부는 이들 FTA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이미 개시하였다. 베트남과는 한·베트남 양자 FTA 추진을 위해 '10년 6월부터 공동작업반 회의를 3차례 개최한바 있고 말레이시아와는 '10년 2월 양국 정상 양자 FTA 추진을 모색기로 합의한 상태다. 인도와는 '11년 1월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를 통해 활용률 제고와 자유화 확대 등 업그레이드 작업에 대해 인도측과 합의했고 금년 8월 이전에 CEPA 협정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업그레이드 추진시 협정의 개방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쟁상대에 비해 불리한 품목도 점검해야 한다. 향후 ASEAN 국가와 양자 FTA 추진시 경제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것과 별개로 경제성장률과 인구, 자원규모, 경쟁국과의 FTA 추진 등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중남미,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추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3-3. 수출의 양적인 확대

우리나라는 양적인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분야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비중 하락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총 수출비중(직수출+대기업을 통한 간접수출)은 2003년 53.1%에서 2008년에 38.8%로 하락하였다. 또한, 소규모 수출업체를 상징하는 연간 100만 달러 미만 수출업체의 비중(금액기준)이 2000년 2.8%에서 2009년 1.5%로 낮아졌다. 이런 수출비중 변화는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의해 해외 시장을 잠식당하고 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샌드위치 신세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

### 3.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시장개척 전략

중 21개가 중국에 의해 잠식당했는데 이중 20개가 중소기업들이 주로 영위하는 중저급 기술분야의 경공업 제품이었다.

2000년 영세수출업체(100만 달러 미만)들의 수출실적을 추적한 결과 이들 중 지난해에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는 30%에 불과하고 100만 달러이상으로 실적이 늘어난 업체비율은 8%에 그쳐 중소기업 수출생태계가 척박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무역생태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획일적인 지원책이 아닌 개별기업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소기업을 따로 분류하여 일정기간 집중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참고로 독일은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시스템을 통해 부품 및 소재분야에서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급여 등에서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직업훈련생의 83%가 중소기업을 통해 육성되고 있어 기술과 고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서비스 수출보다는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순위는 2000년에 세계 12위에서 2009년에 19위로 하락하여 2009년에 9위로 상승한 제조업 수출과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수출순위 차이가 10대 수출국(제조업 기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서비스 수출경쟁력 제고가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표>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순위 비교(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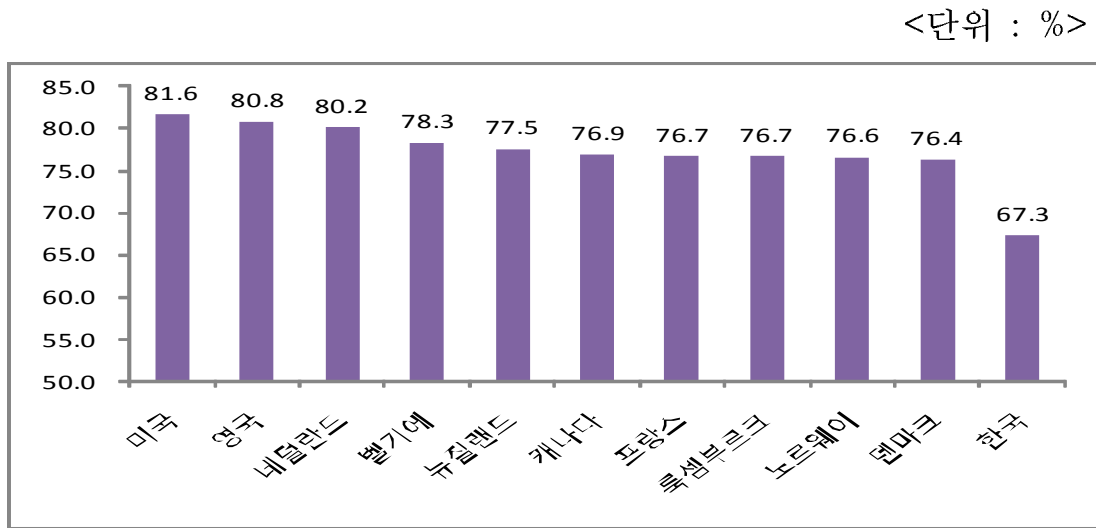
순위(A)	국가명	서비스 순위(B)	격차(A-B)	비교
1	중국	5	-4	제조업 우위
2	독일	3	-1	균형발전
3	미국	2	+1	균형발전
4	일본	6	-2	제조업 우위
5	네덜란드	10	-5	제조업 우위
6	프랑스	4	+2	서비스 우위
7	이탈리아	8	-1	균형발전
8	벨기에	13	-5	제조업 우위
9	한국	19	-10	제조업 우위
10	영국	2	+8	서비스 우위

주) 차이가 1이내일 때 균형발전으로 간주      자료 : WTO와 한국무역협회(2010)

### 3.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시장개척 전략

구체적으로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서비스무역이 왜 중요한지 더욱 확연해진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고용인원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고용은 감소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건설포함) 고용인원은 1,283만 명으로 전년보다 4만 명(3.3%)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6만 명(1.8%)이 줄어 제조업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3%를 기록하여 30개 OECD회원국 중 23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인 70.5%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80% 이상 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기감까지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림>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10대 국가와 한국



주) 미국과 캐나다는 2007년, 나머지는 2008년 기준임      자료 : OECD(2010)

#### 3-4. 수출의 질적인 구조고도화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1964년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60~70년대 주요 수출품이 섬유, 합판, 가발, 신발 등 1차 산업 및 경공업 제품이었던데 비해 오늘날의 주력

### 3.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시장개척 전략

수출품은 반도체, 선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기술집약적인 제품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강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한 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의 추격은 날로 거세지고 있어 우리 수출의 질적인 구조 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추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1위 품목 수는 2004년 61개에서 2008년 52개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1위 품목 수도 2004년 830개에서 2008년에는 1,210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 EU,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5%(홍콩 포함), 11.5%, 10.7%로 수출이 몇몇 주요 국가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7%(HS4단위, 2010년)로 미국(28.3%), 일본(38.2%) 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높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한국무역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진국 경쟁사 제품을 100점으로 했을 때 우리 상품의 실제 가치는 93점이었지만 가격(시장가치)은 87점에 그치고 있어 한국산 상품에 대한 푸대접,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여전한 실정이다.

외형적으로는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진정한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출 구조의 질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주력상품을 넘어설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수출시장의 확대와 다변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출상품을 고급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도 경제 각 부문의 구조조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구조의 질적인 고도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양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기업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3-5. 수입개방이익의 실현

FTA를 통한 기업들의 이익만 강조된 나머지 종종 소비자의 이익을 간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산 제품을 소비(사용)할 수 있고 제품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 이런 기대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데 유의해야 한다. FTA 혜택을 누리면서 수입되는 품목 중 해당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시장지배력이 높으면 관세인하 효과가 유통업체(수입업체) 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가격인하 효과를 찾을 수 없고 수입액 및 업체수 증가도 크지 않아 소비자 후생증대를 야기하기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입시장에서 경쟁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FTA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EU 등과 FTA를 조기에 발효시켜 수입시장의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 유통비용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소비자 단체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입원가를 낮추기 위해 개별업체의 수입 외에 업종 단체와 조합 등이 공동 수입을 통해 바잉파워를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

#### 3-6. 세계통상 공공재 공급에 적극 참여

##### 가. 한국통상경험을 개도국과 공유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FTA 체결도 경쟁국에 비해 늦게 시작했지만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고 있으며, 특히 거대경제권, 자원부국,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제 세계 총 교역량의 3%를 차지하면서 세계 9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다 성숙한 통상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국제통상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감의 무게도 커질 수밖에



에 없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무역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한 우리의 통상정책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자 서구 선진국과는 차별화되는 한국형 ODA 모델이 될 것이다.

#### 나. 대개도국 특혜관세확대

UN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28개 최빈국의 총 인구수는 약 7억 8,540만명(2008년 기준)이며 특히 아프리카지역 최빈국(1인당 **국내총생산개입소득 900달러 미만**에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수명, 칼로리 섭취량, 경제구조의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판정, 2009년 49개국) 국민의 약 44%, 아시아 지역 최빈국 국민의 약 24%가 1인당 하루 소비가 1달러 이하인 절대빈곤 계층에 속해있다. 절대빈곤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하여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논의하고 있으며, WTO도 최빈국과 취약 개도국을 다자무역체제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이들 국가들의 수출 증대와 개발 촉진을 위해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했으며, 최빈국의 절대빈곤 축소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특혜관세 공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2년까지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97%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최빈국 수출은 2008년 기준 69억 7,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5%에 불과하며, 수입의 경우 18억 1,000만 달러로 그 비중은 0.42%에 그치고 있다. 최빈국의 경제상황이나 규모, 공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빈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최빈국 지원

### 3.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시장개척 전략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빈국의 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의 수혜 여부를 결정짓는 원산지규정의 완화 조치를 도입하고,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한 품목의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책임과 역할에 부응해야 것이다.

**다. 신보호주의를 저지: G20에서의 활동지속, DDA 타결에 기여**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는 G20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자는 ‘stand still’을 가장 먼저 제시하였고, 각국 정상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됐을 당시만 해도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예상되었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막아내면서 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나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다. 비 G7 국가에서 최초로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원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도출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글로벌 환율전쟁 와중에서 환율 갈등의 해법을 도출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지분개혁 등에서도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무역 분야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나간다는 G20 정상들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장국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의 어젠다 설정자로서 지속적으로 세계 통상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전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앞장서는 한편, 무엇보다 G20 개최를 통해 국민들 가슴속에 심어진 자신감과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선진통상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3-7. 무역 1조 달러 시대,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 곧 도래할 무역 1조 달러 시대에는 높아진 국가 브랜드를 활용하여 Korea Discount를 **Premium**으로 전환시키는 전략 필요
  -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는 우리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 \* 해외 언론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플레이어, 선진국이 되는 계기로 평가
  -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지속시키기 위해 디자인 개선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한 제품 고급화에 주력해야 함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시장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요구됨
  - [선진국 시장] 고가제품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프리미엄 활용 마케팅 전략을 전개
    - 세계 일류로 인정받는 'Made in Korea' 제품을 고급 명품화하여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
      - \* 무협, 선진시장 빅바이어클럽 운영을 통해 국내 우수제품 수출을 지원
  - [신흥개도국 시장] 중저가 소비재 중심으로 시장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추진
    - 한류, IT제품과 연계된 수출 유망서비스를 발굴하고, 신흥국의 중산층을 공략
    - 지난 G20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개도국 개발의제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및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

### 3.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시장개척 전략

- 이밖에도 중소기업 수출의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을 도모하고, 글로벌 韓商 네트워크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마케팅 채널로 적극 활용
- 마지막으로 상품수출 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관광 등 서비스 부문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과제
  -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 7위 국가가 되었지만, 동등한 수준의 통상대국에 비해서 서비스부문 해외 경쟁력이 취약함
  - 향후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이와 연계된 상품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 과제
-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는 FTA 역시 서비스 시장 개방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